

■ 막바치 치달는 세계수영선수권 정부 보증서 위조 수사

# 수사대상 4명 압축... 법적 책임 입증 관건

공문서 위조혐의 적용

검찰 통화내역 등 역추적

강운태 시장 제외된 듯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대부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광주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입수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위조 관련자 및 과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법적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 '공문서 위조·변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광주 미래’ 건전한 상거래부터 (사)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는 2일 당동시장에서 세계한상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옥외가격표 시제 및 신용카드 활성화 등 건전한 상거래 캠페인을 벌였다.

◇위조 관련자 4명 정도로 압축  
검찰은 정부보증서가 지난 4월2일 광주시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 국제수영연맹(FINA) 제출 20여일 전에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월 중순에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인이 들어간 보증서를 받았으나, 유치위 국제협력마케팅팀 실무자인 함모(여·44)씨의 주도로 국내 대행사가 3월 중순에 이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대행사 측이 위조한 보증서를 함씨와 2019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이모(51) 사무관, 이씨의 부하직원인 6급 이모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은 지난 3월20~28일로, 신청서 제출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 등은 검찰에서 “이미 정부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

에 별다른 신경을 안 썼고 130쪽에 달하는 첨부파일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씨는 “위조 후 (유치 전반을 관할했던) 김윤석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보고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보증서 위조 관련자는 4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직접 수사와 관련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대상에서는 제외된 듯 보인다.

◇법적 책임 입증에 관건  
검찰은 정부보증서 위조 과정이나 전후 정식 보고된 공문서와 관련자 통화내역, 문자, 이메일 등을 광범위

하게 역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의 직접 당사자인 함씨와 그 뒷선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아직 가지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듯 보인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보증서 위조’라는 중대 범죄의 혐의점을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인 지지가 없는 경우, 보고는 했으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된 사실을 인지한 후 방조·묵인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사실관계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 국내 대행을 맡은 업체와 이미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위조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공문서 아닌 공문서 위조  
검찰은 이번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혐의를 내부적으로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로 결정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가능하며, 미수범 처벌도 가능한 ‘중죄’다. 또 형법 제229조는 위조된 공문서의 행사, 즉 사용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작성권한이 있는 자 위조한 경우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일 문화체육부나 국무총리실 직원이 정부보증서를 위조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겠지만 정부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광주시 직원이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 수사 착수 후 고위 공직자로는 처음으로 김윤석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공문서 위조 과정에 관여했는 지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김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 후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있는 그대로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두환 일가 범죄 혐의 단서 포착

검찰 수사팀 체제 전환... 회계 분석 등 3명 추가 투입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원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여온 검찰 환수팀이 조만간 전세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본격 수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경준 부장검사)은 이달 중 전세 일가의 범죄 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팀'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위한) 물밀 작업은 계속 하는 상황이라 이달 내에는 수사팀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와 연결될 만한 걸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전세 일가 및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전세 비자금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자산을 골라 압류 조치하고 관련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

추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 대상은 전세 일가의 금융 재산,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크게 4갈래로 분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연결될만한 정황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 전환을 앞두고 기존 환수팀에 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부부장급 검사 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수수사와 금융 분석에 능통한 검사여서 환수팀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분석에 정통한 고참 수사관 2명도 추가 투입된다.

검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전세 일가가 자산을 형성·관리해온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범죄 혐의로 특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일가가 비자금 등 범죄 수익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전씨의 자녀들이 시공이나 비열에셋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탈세, 배임 등을 저지른 정황이 없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내 회사의 외국 법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외 재산 도피나 역외 탈세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지방재정 어려운데... 국고보조율 더 낮추는 정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위반사례 많다" 인상 권고

정부의 내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중 국고보조율을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낮게 책정된 법령위반 사례가 속출, 보조율을 올리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명법령을 위반해 시행 중인 국고보조사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9개 부처 20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의 국고보

조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예산안 중에는 법정보조율을 위반한 4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 956개 중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안을 보면, 환경부는 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 사업의 수도권 외 지역 국고보조율을 70%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00%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또 노후상수관망개선 시범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관련법령에는 국고보조율이 70%다.

내년 예산 요구안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녹비작물종자대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50%로 규정돼 있지만, 작년부터 40%가 적용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법정보조율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보조율이 없는 사업의 경우 끝없이 정부부담을 하향조정해 지자체의 부담을 늘리니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경욱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정부부처가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할 때 협의하는 기구다. 심의결과에 산출의 때 참고해야한다. 위원회는 내년 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격상된다.

/연합뉴스

### 빛의만평

- 김중두

저러다 말했지, 별일 있겠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군)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국내 / 울릉도상품 [순천/광주출발]

울릉 3일 [목호항] 신비의 울릉도 여행 (출발일 8월 15일(목))	413,000원~
울릉 3일 [강릉항] 신비의 울릉도 여행 (출발일 8월 30일(금))	345,000원~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보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 천혜의 휴양지 필리핀 세부

8월 7일 ~ 8월 17일(총4회) 매주 수요일/토요일

세부 4일 [APAF-ZZT] 1,199,000원 ~ 799,000원 ~ (출발일 : 8월 7일)	세부 5일 [APAF-ZZT] 749,000원 ~ (출발일 : 8월 10일)
세부 4일 *10명 한정* [APAF-ZZA] 999,000원 ~ 799,000원 ~ (출발일 : 8월 14일)	세부 4일 *10명 한정* [APAF-ZZE] 1,599,000원 ~ 1,199,000원 ~ (출발일 : 8월 14일)

### 광주/전남 기획상품

[CWP871-MUE] 난주(난주)/황해(서림)/사파두(사막) 5일 599,000원~

[JKP744-CRD] 아나기와 뱃놀이 카멜리아 3박4일 349,000원~

[AGK48] 18+ 강원도골프 1일 145,000원~

[AGK48] 18+ 강원도골프 2일 369,000원~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영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족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권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권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청) ■관광관련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